

민주 혁신안, 대의원 투표 배제·현역 공천 페널티 강화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 발표...중진 용퇴·올드 보이 불출마 촉구 당원 영향력 커져 친명-비명계 충돌 예상...현실화 여부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국회의원의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혁신안에 대한 민주당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과연 혁신위의 제안이 현실화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 혁신안이 광주·전남 등 호남 출신 구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위기 국면에서 민심의 주목을 받았던 혁신위는 혁신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당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각종 설화로 동력을 상실하면서 결과물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의원제 무력화=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정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대의원제 무력화=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정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대의원 비중을 없애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40%에서 70%로 대폭 높이는 것이다. 또 일반당원 비중을 없애고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일반국민 비중을 25%에서 30%로 높였다. 사실상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혁신위는 전국 대의원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당원 직선제'도 내놨다.

대의원제의 폐지·축소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 핵심 당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은 현재 1만6000~1만7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약 120만명)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대의원 1명의 표가 약 60명의 권리당원 표와 맞먹는 셈이다.

혁신위의 제안은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당내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내 일각에서

는 대의원제 무력화 배경에는 이재명 체제 강화의 노림수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혁신안 논의 과정에서 당내 친명-비명 간의 충돌도 예상된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를 노리는 당권 주자들이 당내에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제 무력화는 상당한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며 "친명 성향 최고위에서 혁신안을 강행할 경우, 친명과 비명 진영간의 전면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페널티 강화=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 달라고 했다.

경선 득표 30~40% 감산 적용은 하위 20%에 대한 실질적인 컷-오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하위 20%에서 30%로 페널티 대상을 확대한 것도 민감한 부분이다. 기존 시스템 공천의 틀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당내 현역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 페널티 대상과 폭이 조정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위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 구성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상시평가 제도 준수 ▲총선 경선 시 단수공천 허용 범위 최소화-경선 선거구 대폭 확대 ▲총선 경선에서 문자발송과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횟수, 방법을 규정으로 명시 ▲경선 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혁신위는 공천 규칙에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유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자유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된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당내 중진들에게 용퇴를,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올드보이들에게는 불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혁신안 발표와 함께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저희의 혁신안이 실패하여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가운데)혁신위원회가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던 '공직유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자유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된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당내 중진들에게 용퇴를,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올드보이들에게는 불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혁신안 발표와 함께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저희의 혁신안이 실패하여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잼버리 대회 유종의 미는 대통령 사과"

"전 정부 탓, 전북도 탓 치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 대회의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사과"라며 "15개월 전 물러난 전 정부 탓을 하는 역대급 준비 부실과 후안무치,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에게 덮어씌우는 책임전가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전북 탓으로 전회하는 모습이 치졸하다"며 "국민 돈으로 막고, 희생양 만들 궁리가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질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다.

송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도 "총체적인 무능함

을 드러낸 정부의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행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상황이 이렇더라도 정부는 자화자찬, 여당은 전 정부와 야당 탓만 하고 반성과 사과는 없다"며 "반복되는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이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여론에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는 데 대해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기승전 문재인 정부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말로 염치가 없다"며 "척고대조하기는 커녕 자랑하고 있다.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민주 민생연석회의 출범...첫 주제는 '지역화폐 부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당내 논의체인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첫 회의의 주제를 '지역화폐 사업 부활'로 잡았다. 공동의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의 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위 양극화 현상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모세혈관이 튼튼해야, 심장만 커지고 튼튼하다고 어떻게 건강 소리가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살면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살고, 지방도 산다"며 "지역화폐에 대한 투자액 대비 효율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체감하고 있다. 언젠가는 전 세계에 전파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분과별로 의제를 선정해 논의한 뒤 월 1회 공개회의를 열 계획이다. 원내 지도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안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檢 소환조사 당당히 응하겠다"... '백현동 의혹' 17일 출석

성남 FC·대장동 이어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0일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역사와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17일 출석

해 조사받기로 했다"며 "이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각각 받았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반문했다.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

전라남도일자리종합센터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일자리를 찾는 전라남도민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취업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취업알선 기관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하세요?

전문상담사가 최적의 일자리를 구할수 있도록 심층상담 및 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인재가 필요하세요?

구인등록부터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가진 맞춤형인재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구직상담 및 구직신청서 작성 (전화, 방문) >> 맞춤형 일자리정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알선) >> 취업성공

구인상담 및 구인신청서 작성(전화, 팩스, 방문) >> 맞춤형인재추천(알선) >> 면접,인재채용 >> 사후관리

동부센터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36, 전남일자리플랫폼 1층
T. 061) 750-7700 F. 061) 750-7790

서부센터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T. 061) 287-1142 F. 061) 287-1146